

경제 주체의 정책방향성 선택과 진보, 보수 성향 판단에 관한 연구*

우경봉**

요약

본 논문은 한국 시민의 선호 정책방향성 선택과 스스로의 정치성향 판단과의 관계를 관찰하고자 한다. 선호 정책방향성 관찰을 위한 주요 현안에는 통일, 최저임금, 고용안정성, 생계형 적합업종, 종합부동산세, 교육, 다문화사회, 성소수자의 8개 사안이 포함되었다. 분석에는 2019년 1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전국 거주 1250명의 응답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관찰되었다. 통일을 희망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승산(odds)이 증가한다. 다음 연도(2020년) 최저임금의 인상을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승산이 증가한다. 평등 교육 문화를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승산이 증가한다. 성소수자 사회적 권리의 제도적 인정을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승산이 증가한다. 한편, 일부 정책변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자의 중도성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정부 개입에 의한 고용안정성 증대를 지향하는 경우 중도성향 판단 승산이 증가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지향하는 경우 중도성향 판단 승산이 증가한다. 이는 고용안정과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추구하는 중도성향층의 지향이 데이터를 통해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변수에서의 관찰 결과는 강력한 중부세 인상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정부 또는 집권당에 대한 중도 성향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 주제어 : 정책방향성 선택, 진보, 보수

* 이 논문은 2019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우경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wkb@knou.ac.kr

I. 서 론

2019년 7월 9일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13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하여 하나고 등 5개교는 기존 지위를 유지하고 경희고 등 8개교에 대해서는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 결정에 대해 보수진영과 해당 학교 학부모 및 관계자가 크게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육감 선거 때마다 경쟁지향과 평등지향 교육의 의견 대립은 반복되고 있다.

한편, 같은 해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9%(240원)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2.9% 인상에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크게 반발했지만 결정이 번복되는 일은 없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 상승한 것에 대해 경영계 및 보수계열 정당이 지속적으로 반발해온 점, EU의 일부 국가를 시작으로 글로벌 경제불황 징후가 보고된 점 등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의 인상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역시 매년 인상률 결정 시기가 다가오면 인상의 폭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보수적 견해와 진보적 견해가 서로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인 최저임금 수준과 교육문화 방향성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에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통일, 고용안정화, 부동산, 다문화사회, 성소수자 등의 사안에 대해 한국의 생산 및 소비의 주체는 어떤 방향성을 선호하는가? 또한, 주요 현안에서의 정책 방향성 선택은 한국 시민의 진보, 보수, 중도 성향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료의 관찰 및 분석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우선, 한국 시민의 정치의식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가상의 축으로 진보-보수 축을 설정하였다. 정치의식 분석과 관련해 채장수(2003, 2004) 및 Aidt, Castro & Martins(2018), Jarrodi, Byrne & Bureau(2019), 그리고 Thomsson & Vostroknutov(2017) 등과 같이 좌파와 우파의 개념을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남북전쟁에 의한 상처가 깊게 남아 있고 분단 상황이 70년 가까이 이어지는 한국에서는 좌파라는 용어에 대해 고령층

을 중심으로 강한 거부감을 느껴, 세대 간 갈등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등의 편 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이 이념의 본질 규명이 아닌, 정책 방향성 선택과 사회경제적 정체성 판단과의 관계를 관찰하는 경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진보-보수 축 설정이 연구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한국적 진보, 보수의 특징을 탐색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정책 방향성 선택과 진보, 보수 성향 판단과의 관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진보, 보수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 그에 따른 설문지 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진보, 보수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진보는 종종 ‘급진’, ‘개혁’, ‘발전’ 등과 개념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선명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채장수, 2003), 진보와 보수가 공유한 단 하나의 속성만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기(강원택, 2005)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진보, 보수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여 본 논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연구로는 강원택(2005)을 들 수 있다. 강원택(2005)은 2002년, 2004년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일보가 함께 한 국회의원 대상 이념성향 조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진보-보수의 이념적 속성은 ‘반공이데올로기의 거부-수용(혹은 과거 발전국가 유산의 청산-존치)’라는 하나의 축과 ‘자유주의-권위’라고 하는 또 다른 축이 교차하는 2차원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반공이데올로기의 거부-자유주의의 강조가 한국 사회 진보의 특성이며, 반공이데올로기의 수용-권위의 강조가 한국 사회의 보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강원택, 2005). 강원택(2005)은 진보, 보수의 이념적 속성을 두 개의 차원으로 간결하게 정리하여 한국의 이념 지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의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된 정치성향 연구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러 연구에서 한국 사회 내부 갈등의 특징으로 복잡성이 지적된다. 김호기(2007)는 사회갈등을 크게 ‘이익 갈등(노사, 빈부, 지역)’과 ‘가치관 갈등(개발, 성평등, 세대)’으로 구분한다. 서구의 경우 이익 갈등에서 가치관 갈등으로 중심이 변화되어 왔는데, 학벌사회를 둘러싼 갈등은 두 가지가 모두 얽혀 있는 우리 사회에서 유독 두드러진 ‘복합형 갈등’이며, 한국에서는 가치관 갈등과 이념 갈등이 동시적으로 분출하는 ‘압축 갈등’으로 나타난다고(김호기, 2007) 지적한다. 박길성

(2008) 역시 오늘의 한국사회는 마치 갈등의 전람회장을 연상시킬 만큼, 갈등은 보편화되고 일상화되었으며,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의 진보, 보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한국 사회의 이념 지형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다른 한편으로 서구에 비해 다양한 갈등 양상이 존재함을 설명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공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원택(2005)이 규명한 반공이데올로기 및 권위주의의 2차원 축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상술한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듯 한국 사회의 갈등양상은 상당히 복잡하며, 특히 교육 문제와 같은 압축적 갈등 양상과 진보, 보수 의식과의 관련성 설명이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통일, 교육, 최저임금 등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진보적 및 보수적 방향성을 가지는 선택지를 구성하여 선호하는 정책 방향성 선택과 응답자 스스로의 진보, 보수 성향 판단이 일치하는가를 관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진보적, 보수적 방향성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택(2005) 등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국적 진보, 보수의 특징에 대한 탐색적 접근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진보적 방향성을 ‘한국 사회의 역사적, 상식적 맥락에서 진보라고 수용되는 개념 및 사회 제 영역에서 소수자(minority)의 경제적 이익, 사회적 권리 증대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 보수는 진보와 상반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진보, 보수의 개념이 고정 불변의 특정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 및 공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서술한 진보, 보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전라권 거주자는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H2 월소득이 낮은 집단은 보수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H3 남북통일을 희망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H4 최저임금 인상을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H5 고용안정성 향상을 위해 정부 개입을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H6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H7 종부세 인상을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H8 평등 지향의 교육문화를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H9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H10 성소수자 사회적 권리의 제도적 인정을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번은 한국 현대사의 맥락이 반영된 시민 차원에서의 한국적 진보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번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는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 이익에 따라 투표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따라 투표하며, 자기가 동일시하고 싶은 대상에게 투표한다(조지 레이코프(2015))’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원택(2013)은 한국은 저소득층에 고령층(6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아 그들의 이념적 보수성에 의해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 3번 역시 1980년대 학생운동의 사회적 영향 증대와 함께 한국 사회에 공유된 한국적 진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¹⁾

가설 4번~10번은 앞서 제시한, 사회 제 영역에서 소수자(minority)의 경제적 이익, 사회적 권리 증대의 방향이라는 본 연구의 진보적 방향성 설정을 반영한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2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를 검토하고 기초결과를 살펴본다. 3절에서는 통계모형분석을 진행하고 4절은 이 논문의 결론에 해당한다.

1) 남북통일을 희망하면 진보성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역시 시민 차원에서의 가설이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할 경우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Ⅱ. 자료수집 및 기초분석

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는 2019년 1월10일~24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응답 자료가 사용되었다.²⁾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전국 16개 행정구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에서 회수된 1,250명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징 요약

연령	만 20세 ~ 29세	14.8%
	만 30세 ~ 39세	19.1%
	만 40세 ~ 49세	21.9%
	만 50세 이상	44.2%
거주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9.4%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10.4%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6.2%
	전라권(광주/전북/전남)	9.9%
	강원권(강원)	3.0%
	제주권(제주)	1.1%
성별	여성	51.2%
	남성	48.8%
결혼	싱글	31.4%
	기혼	68.6%
근로형태	종업원이 있는 사업주	3.7%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	8.9%
	임금(급여)을 받는 근로자	57.6%
	가사(주부)	18.4%
	학생	4.4%
	휴직 또는 무직	8.0%

2) 설문조사는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설문지를 통계조사 전문기업인 (주)와이즈인컴퍼니에 의뢰하여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11.8%
	200만원 ~ 300만원 미만	15.0%
	300만원 ~ 400만원 미만	19.5%
	400만원 ~ 500만원 미만	19.5%
	500만원 ~ 600만원 미만	14.0%
	600만원 ~ 700만원	8.2%
	700만원 이상	12.0%
학력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1.1%
	고등학교 졸업	23.0%
	대학교(2, 3, 4년제) 졸업	66.7%
	대학원(석사, 박사) 졸업	9.2%

설문조사는 기초 인구통계학적 특징, 정치성향(진보, 보수, 중도)에 대한 판단, 통일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 지지 정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사회현안으로는 남북통일 희망 여부, 최저임금 수준, 고용형태(정규직 비율 증가 찬성 여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종합부동산세 수준, 고교 및 대학입시 교육정책의 방향성, 다문화사회 수용 여부, 성소수자 사회적 권리의 제도적 인정 등이 포함되었다.³⁾⁴⁾

또한, 사회현안 문항에서 각 현안 별 진보적, 보수적 방향성을 구분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변화의 크기(또는, 속도)를 고려한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진보 성향층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변화가 지나치게 크지 않은 것이 선호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통일 찬성 여부를 제외한 사회현안 문항의 선택지는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번이 가장 진보적, 2번이 진보적, 3번이 보수적, 4번이 가장 보수적인 특징을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최저임금 변수의 경우, ‘1번 10% 인상, 2번 5% 인상, 3번 5% 인하, 4번 10% 인하, 5번 잘 모르겠음’과 같다.

3) 자료 수집에 사용되고 본 연구에 반영된 설문 문항을 부록 1에 제시하였다.

4) 지지 정당 분석에는 컨조인트(conjoint) 분석에 의해 수집된 자료가 사용된다. 다른 관점에서 의 분석 및 지면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정당 지지 관련 분석은 별도 논문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2. 기초 분석

주관적 정치성향 판단과 한국 사회 주요현안에 관한 문항의 응답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선택지 구성의 차이에 의해 2번, 3번 문항의 응답 결과는 본문에서 제시된다.

<표 2> 주요 문항의 응답 결과

설문 번호	사회현안	선택지 1번	선택지 2번	선택지 3번	선택지 4번	선택지 5번
1번	정치성향	4.9%	23.8%	58.9%	11.4%	1.1%
4번	최저임금	24.6%	46.4%	17.8%	7.8%	3.5%
5번	고용안정성	38.8%	41.5%	7.2%	8.9%	3.6%
6번	적합업종	50.2%	32.0%	4.3%	8.8%	4.7%
7번	종부세	37.4%	28.0%	18.4%	9.6%	6.6%
8번	교육	32.9%	39.4%	14.3%	8.5%	4.9%
9번	다문화	21.7%	40.2%	23.2%	11.8%	3.1%
10번	성소수자	11.4%	38.1%	22.8%	20.5%	7.2%

설문지 1번 문항 주관적 정치적 성향 판단 문항의 선택지는 1번 ‘매우 진보적이다’, 2번 ‘진보적이다’, 3번 ‘중도성향이다’, 4번 ‘보수적이다’, 5번 ‘매우 보수적이다’로 구성된다. 1번과 2번을 진보성향으로 분류하고, 4번과 5번을 보수성향으로 분류하면 진보, 보수, 중도 성향의 비율은 각각 28%, 15%, 56%이다.⁵⁾ 2018년 7월 중순~8월 초에 걸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2018』에서는 진보 34%, 보수 18%, 중도 48%로 나타났다. 같은 해 10월에 실시된 주간조선 창간 50주년 여론조사결과에서는 35%, 25%, 40%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조사 결과와 비교해 중도 응답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도표에서는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제시하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문에서는 반올림 한 수치를 사용한다.

2번 스스로의 정치성향 판단기준을 묻는 문항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 12.0% ① (과거 포함) 지지하는 인물 또는 정당의 정치적 색채 관련
- 30.6% ② 경제문제 관련(최저임금, 부동산 등 성장과 분배)
- 29.5% ③ 통일 및 외교, 안보문제 관련
- 10.0% ④ 교육문제 관련
- 4.0% ⑤ 다문화 정책 관련(경제적 이민 수용 등)
- 2.9% ⑥ 성소수자문제 관련
- 4.7% ⑦ 출신지역, 가정 및 주위의 전반적인 분위기
- 5.6% ⑧ 막연히(잘 모르겠다)
- 0.8% ⑨ 기타

위 결과에서 경제문제가 한국 시민의 정치성향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미세한 차이로 통일·외교안보가 다음을 잇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성향 판단에 두 가지 사안이 다른 사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은 한국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3번 남북통일 희망 여부는 찬성 69%, 반대 31%로 나타나, 약 7 대 3의 비율로 통일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크게 우세했다. 정동준 외(2019)의 2번 문항 역시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이다. 이 문항의 응답결과는 1번 ‘매우 필요하다’ 22%, 2번 ‘약간 필요하다’ 24%, 3번 ‘반반/ 그저 그렇다’ 24%, 4번 ‘별로 필요하지 않다’ 14%, 5번 ‘전혀 필요하지 않다’ 3%이다. 선택지 3번을 문자 그대로 반반으로 해석하여 필요와 불필요로 나누면 통일 필요 72%, 불필요 28%로 분류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응답결과를 보였다.

통일을 희망하는 이유를 묻는 별도 문항의 응답 결과는 ‘외교, 국방 등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므로’ 40%, ‘역사와 언어를 공유하는 같은 민족이므로’ 34%, ‘한국이 직면한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20%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4번 다음 해(2020년) 최저임금 기대 수준 문항은 5% 인상의 소폭인상을 희망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9년 7월 12일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년 대비 2.9%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5번 정규직 비율의 증대 등과 같은 고용안정성에 관한 질문의 응답 결과는 '정규직 증가 정책의 점진적 진행'(42%)과 '정규직 증가 정책 적극 찬성'(39%)을 선택하여 선택지 1번, 2번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6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찬성 여부를 묻는 문항은 선택지 1번 '반드시 필요'(50%)와 2번 '법 취지에 동의하며 지정에는 신중'(32%)을 선택 비율이 높았다. 특히 가장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선택지 1번의 비율이 50%를 초과한 유일한 문항이다.

7번 종합부동산세 수준에 대한 문항에서는 현재 수준보다 대폭 인상(37%)하거나 소폭 인상을 검토(28%)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했다. '잘 모르겠음'의 비율이 7%로 다른 문항의 평균 수준(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8번 고교 및 대학 교육의 방향성 문항은 '평등 교육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39%)과 '평등 교육 취지에 적극 동의'(33%) 의견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 사회의 지나친 사교육 경쟁에 대한 경계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9번 다문화사회 정책 방향성 문항은 '선별적 이주 등 신중하게 결정'(40%)과 '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지향'(22%)이 다수를 점했지만, '빠르게 다문화 사회가 진행되는 것에 반대 입장'이 23%로 나타나는 등 이전 문항에 비해 보수적 선택지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

10번 성소수자 사회적 권리의 제도적 인정을 묻는 문항은 다른 문항과 사뭇 다른 결과가 관찰되었다. 가장 진보적인 내용을 가진 1번 선택지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1번과 2번 선택지를 합한 수치가 50%에 달하지 못한 유일한 항목이었다.

기초분석 결과 남북통일 희망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는 찬성 비율이 반대의 두 배 이상 높았다. 최저임금 수준 등을 묻는 주요 사회현안 각 문항의 1번~5번 선택지를 모두 더하여 총응답수로 나눈 비율은 다음과 같다. 1번(가장 진보적 선택지)

43%, 2번(진보적 선택지) 53%, 3번(보수적 선택지) 22%, 4번(가장 보수적 선택지) 15%, 5번(잘 모르겠음) 7%.

Ⅲ. 정책방향성 선택과 진보, 보수, 중도 판단 분석

1. 정책방향성 선택과 진보, 보수, 중도 판단

기초분석 결과 보수적 견해인 3, 4번 선택지에 비해 진보적 견해인 1, 2번 선택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았다. 본 논문의 논점과 관련해, 응답 결과에서 진보, 보수, 중도의 각 정치성향별 특징을 도출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아래 식 (1)과 같은 추정모형을 설정하였다.⁶⁾

$$\begin{aligned} \text{정치성향판단}_i = & b_0 + b_1 \text{연령}_i + b_2 \text{결혼}_i + b_4 \text{거주지역}_i \\ & + b_5 \text{근로형태}_i + b_6 \text{월소득}_i + b_7 \text{학력}_i + b_8 \text{통일}_{ij} \\ & + b_9 \text{최저임금}_{ij} + b_{10} \text{고용형태}_{ij} + b_{11} \text{적합업종}_{ij} + b_{12} \text{중부세}_{ij} \\ & + b_{13} \text{교육}_{ij} + b_{14} \text{다문화사회}_{ij} + b_{15} \text{성소수자}_{ij} + \epsilon_{ij} \quad (1) \end{aligned}$$

식 (1)의 종속변수인 정치성향판단은 설문지 1번 문항의 선택지 1번(매우 진보적)~5번(매우 보수적) 값이다. 독립변수에서 성별, 결혼여부, 거주지역, 통일은 더미변수이고 그 외 연령, 월소득, 최저임금 등의 변수는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였다. 최저임금 등 연속형 사회현안 변수는 가장 진보적인 선택지 1번이 -3, 진보적 선택지 2번이 -1, 보수적 선택지 3번이 1, 가장 보수적인 선택지 4번이 3의 값을 가진다.

식 (1)에 이항로짓(binary logit)모형 적용을 위해 스스로의 정치성향 응답결과

6) 이 추정모형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가정 1. 종속변수와 연속형 독립변수는 일정한 간격을 가진 척도(등간 척도)로 구성된다. 가정 2.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정치성향 판단 확률이 일정하게 변화한다.

를 진보(매우 진보적+진보적), 보수(보수적+매우 보수적), 중도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진보, 보수, 중도의 각 정치성향 판단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진보=0, 1, 보수=0, 1, 중도=0, 1.

이항로짓모형은 다음과 같은 로지스틱 분포를 바탕으로 한다.⁷⁾

$$F = \frac{\exp(\beta' x_i)}{1 + \exp(\beta' x_i)} \quad (2)$$

확률 값은 다음 식 (3)과 같이 표현되며, ϵ_i 는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

$$\text{prob}(y_i = 1 | x_i, \epsilon_i) = \frac{\exp(\beta' x_i + \sigma \epsilon_i)}{1 + \exp(\beta' x_i + \sigma \epsilon_i)} \quad (3)$$

설문 결과에 의해 관찰된 응답자의 특징 Z_i 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Z_i = \beta_0 + \beta_1 X_{ij} + \beta_2 X_{ij} + \dots + \beta_k X_{ij} \quad (4)$$

응답자 i 가 본인의 정치성향을 진보(또는 보수, 중도)라고 판단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r(Y_i = 1) = \frac{1}{1 + e^{-Z_i}}, \quad \Pr(Y_i = 0) = \frac{1}{1 + e^{Z_i}} \quad (5)$$

7) 통계분석에서 이항로짓(binary logit)모형 적용은 Greene(2016)을 참조하였으며, 데이터 분석에 계량경제분석 프로그램 NLOGIT(v.6)을 사용하였다. 이항로짓모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Greene(2016)을 참조하기 바란다.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는 식 (6)과 같이 표현되며, 최우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한다.

$$L(\beta) = \prod_{i=1}^N \Pr(Y_i) = \prod_{i=1}^N \left(\frac{1}{1 + e^{-Z_i}} \right)^{Y_i} \left(\frac{1}{1 + e^{Z_i}} \right)^{1 - Y_i} \quad (6)$$

식 (1)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분석에서 독립변수의 부호 해석은 인구통계 변수에서 부호가 양(+)이면 해당 변수(의 증가)가 진보, 보수, 중도의 각 성향 판단 확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현안 변수 중 통일 역시 동일하다.

한편, 연속형 사회현안 변수의 경우 부호가 양(+)이면 보수적 견해(3번, 4번) 선택의 증가가, 그리고 음(-)이면 진보적 견해(1번, 2번) 선택의 증가가 각 성향 판단 확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등 연속형 사회현안 변수는 진보 범주에서 음(-)부호, 보수 범주에서 양(+)부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도 범주에서는 사안에 따라 양(+) 또는 음(-)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⁸⁾

<표 3> 정책 방향성 선택과 진보, 보수, 중도 판단

구분	진보			보수			중도		
		b	exp(b)		b	exp(b)	b	exp(b)	
상수	**	-1.040	0.354	**	-1.311	0.270	-0.266	0.766	
연령	**	-0.196	0.822	*	0.184	1.202	0.059	1.061	
월소득	*	0.079	1.082		-0.008	0.992	-0.052	0.950	
학력		0.017	1.017		0.032	1.033	-0.059	0.943	
성별	*	-0.262	0.770	***	-0.566	0.568	***	0.484	1.623
결혼		-0.274	0.761		0.125	1.133	0.159	1.173	
수도권		-0.176	0.839		0.198	1.219	0.041	1.042	
경상권		-0.094	0.910		0.196	1.217	-0.026	0.974	

8) 범주형 독립변수인 거주지역, 근로형태 변수에서 참조집단(reference group)은 각각 충청권, 자영업이다.

전라권	*	0.518	1.678	***	-1.480	0.228		-0.049	0.952
강원권		-0.141	0.869		-0.352	0.704		0.319	1.375
제주권		-0.576	0.562		0.488	1.629		0.098	1.102
사업주		0.623	1.864		-0.500	0.607		-0.238	0.788
임금근로자		-0.146	0.864		-0.398	0.672		0.340	1.405
주부		0.109	1.115		-0.519	0.595		0.166	1.180
학생		-0.721	0.486		-0.756	0.469	**	0.884	2.422
휴무직		-0.035	0.966		-0.406	0.666		0.259	1.295
통일	***	0.608	1.836	***	-0.850	0.428		-0.012	0.988
최저임금	***	-0.200	0.819	**	0.162	1.176		0.056	1.057
고용안정성		0.009	1.009	**	0.170	1.186	*	-0.115	0.891
적합업종		-0.044	0.957		-0.046	0.955		0.001	1.001
중부세	***	-0.151	0.860		-0.011	0.989	**	0.114	1.121
교육	***	-0.235	0.791	**	0.152	1.164		0.066	1.068
다문화		0.011	1.011		-0.025	0.975		0.016	1.016
성소수자	***	-0.248	0.780	***	0.389	1.475		0.008	1.008
		Data 1250			Data 1250			Data 1250	
		Pseudo R-squared 0.106			Pseudo R-squared 0.156			Pseudo R-squared 0.03	

Note: Pseudo R-squared은 McFadden Pseudo R-squared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seudo R^2 = 1 - \log L / \log L_0$

연령 변수는 진보 범주에서 음(-), 보수 범주에서 양(+)부호를 가지며, 연령 한 단위가 증가하면 진보 성향 판단 승산(odds)이 18% 감소하며, 보수 성향 판단 승산은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한 단위 증가할 때 진보성향 판단 승산이 8%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성별 변수에서 여성이 남성 대비 진보 및 보수 성향이라고 판단할 승산은 각각 23%, 43% 낮으며, 중도로 판단할 승산은 1.6배인 것이 관찰되었다.

거주지역 변수에서 전라권 거주자는 참조집단인 충청권 거주자에 대해 진보성향 판단 승산이 68% 더 높으며, 보수성향으로 판단할 승산은 78% 낮았다. 이 결과는 연구가설 1번을 지지한다. 근로형태 변수에서 학생은 참조집단인 자영업에 대해 중도로 판단할 승산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또는 대학원생)은 진보성향을 가지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럼에도 중도 범주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결과가 관찰된 것은 최근의 ‘보수적인 20대’ 논쟁

과 함께 현재 대학생의 정치성향이 기존의 사회 통념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월소득의 증가는 진보 범주에서 승산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연구가설 2번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지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현안 변수 중 남북통일 찬성을 선택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승산이 84% 증가하며, 보수성향 판단 승산은 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3번이 지지되었다.

다음 연도(2020) 최저임금 수준 변수에서 보수적 견해(3, 4번)를 지향할 경우 진보성향 판단 승산이 18% 감소하며, 보수성향 판단 승산은 18%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최저임금 사안에서 진보-보수의 의견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대립하는 것을 나타내며, 연구가설 4번이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규직 비율 증대를 위한 정부개입 동의 여부를 묻는 고용안정성 변수에서 정부개입 반대 견해를 선택할 경우 보수성향 판단 승산이 19% 증가하고, 정부개입 찬성 견해를 선택하면 중도성향 판단 승산이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용안정성 사안에서 진보적 선택을 하는 경우 스스로의 정치성향에 대해 중도성향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가설 5번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종합부동산세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종부세 인상을 지향할 경우 진보성향 판단 승산이 14% 증가하며, 종부세 인하를 지향하는 경우 중도성향 판단 승산이 12%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종부세와 관련해 보수적 선택을 하는 경우 중도성향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가설 7번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경쟁교육 또는 평등교육 지향성을 묻는 교육변수에서는 보수적 견해를 지향할 경우, 진보성향 판단 승산이 21% 감소하며 보수성향 판단 승산이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진보-보수의 의견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대립하는 것을 나타내며, 연구가설 8번이 지지되었다.

성소수자 사회적 권리의 제도적 인정에 관한 변수에서는 보수적 견해를 지향하

면 진보성향 판단 승산이 22% 감소하며, 보수성향 판단 승산이 48%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성소수자 변수에서도 진보-보수의 의견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대립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연구가설 10번이 지지되었다.

통일 변수의 진보성향 판단 승산과 성소수자 변수의 보수성향 판단 승산은 통계적 유의성이 높고 계수의 절대값도 상대적으로 커, 다른 사안에 비해 진보성향층과 보수성향층의 의견이 선명하게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적합업종 및 다문화 사회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아, 연구가설 6번과 7번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한편 진보, 보수, 중도 각 모형의 유사결정계수(pseudo R-squared) 값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어, 본 연구에서 설정된 통계모형에 의해 보수성향 집단의 선택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설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안에 대해 진보적 견해와 보수적 견해를 선택한 응답자가 판단한 소속 집단을 다음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 주요현안 별 진보적 견해 및 보수적 견해의 주체

사회현안	진보적 견해	보수적 견해
통일	진보	보수
최저임금	진보	보수
고용안정성	중도	보수
적합업종	-	-
종부세	진보	중도
교육	진보	보수
다문화	-	-
성소수자	진보	보수

표 4를 통해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에서 진보적 견해와 보수적 견해가 방향성을 가지고 대립하는 사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안 별 대립되는 견해의 주체가 스스로의 정치성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하다. 통일, 최저임금, 교육, 성소수자 사안에서는 진보, 보수 성향층으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계수의 절대값 크기를 통해, 통일과 성소수자 사안에서 진보성향 시민과 보수성향 시민 간 의견 차이가 특히 선명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정성 사안에서는 진보적 견해 지향이 중도성향 판단 승산 증가로 이어졌다. 고용불안정에 의한 사회적 불안감 고조가 표본의 56%를 차지하는 중도성향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사안의 결과는 흥미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종부세 인하 정책 선호가 중도성향 판단 승산 증가로 이어지는 결과는 만약 종부세 대폭 인상 정책이 시행될 경우 중도 성향층의 정부 또는 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IV. 결 론

1. 요약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전국 규모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시민의 사회현안 정책방향성 선택 및 정치성향 판단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 H1 전라권 거주자는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H3 남북통일을 희망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H4 최저임금 인상을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H8 평등 교육문화를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H10 성소수자 사회적 권리의 제도적 인정을 지향하는 경우 진보성향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고용안정성과 종합부동산세 변수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진보적 및 보수적 방향성에서 예측하지 못한 다음과 같은 결과가 관찰되었다.

H5' 고용안정성 사안에서 정부 개입에 의한 고용안정성 증대 지향은 중도 성향 판단 승산 증가로 이어진다.

H7' 종합부동산세 사안에서 종부세 인하 지향은 중도성향 판단 승산 증가로 이어진다.

이 결과는 고용안정과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추구하는 중도성향층의 지향이 데이터를 통해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변수에서의 관찰 결과는 최근 종부세 인상 정책 기조가 이어지자 집권당에 대한 중도 성향층 지지율이 하락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 시민이 사회 주요현안에 있어 어떠한 방향성을 선호하며, 이것이 진보, 보수, 중도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생산 및 소비의 주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적합업종과 다문화 변수에서는 응답자들의 선택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특정 경향성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이것은 해당 사안이 가지는 복잡성과 적합업종 및 다문화 사안에 대해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존재하는 편차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설문지 디자인이 가지는 한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배척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진보의 개념을 먼저 설정하고 그 반대 지향을 보수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가설 5와 가설 7에서 중도 지향성이 새롭게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계모델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성이었다. 한국에서의 중도 지향성이 가지는 실체에 대한 접근을 향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시민의 진보, 보수, 중도 의식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적’ 진보, 보수, 중도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는 실험적 연구로 위치 매김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진보, 보수, 중도라는 정치성향 뿐만 아니라 연령대(또는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시민의 사회경제적 선택을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택(2013)은 한국 고령층(60대 이상)의 낮은 소득수준을 저소득층의 ‘계급 배반’ 투표

현상의 주된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최근 ‘20대의 보수화’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감소할수록 진보성향 판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20대 남성의 보수화를 고려한다면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치성향 별 갈등 양상과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이 연령대별(또는 세대 간) 분석에서 관찰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의 본 연구의 한계 극복과 새로운 관점에서의 자료 분석을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2. 미래사회에 대한 시사점

한 사회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회 구성원들 간의 정확한 정보 공유, 의견 교환 및 합의,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상식이 통용되는 않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오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토론 문화를 중요시하는 영국조차 브렉시트(BREXIT) 결정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에 의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찬성파와 반대파의 일부 구성원들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를 한 것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브렉시트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 결과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래 세대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었다.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와 정확한 정보 획득 없이 영국의 정치·경제·사회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영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요 거점을 옮기게 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진보적 및 보수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선호하는 정책방향성과 응답자 스스로의 진보, 보수 성향 판단과의 관계 분석을 시도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주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이 한국 사회의 미래상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내부 구성원인 진보, 보수, 중도층의 논의 과정에서 상호 간의 이해와 합의를 추구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2), pp. 193-217.
-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한국정당학회보*, 12(3), pp. 5-28.
- 김명지, 2020, 지지율하락에 놀랐나... 종부세 등 부동산5법 재추진, 접속날짜: 2020.07.30.,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2/2020070202951.html.
- 김호기, 2007, 사회갈등과 거버넌스, *현대사회와 문화*, 1(1), pp. 97-126.
- 박길성, 2008, 한국사회의 갈등지형과 경향, *한국사회*, 9(1), pp. 5-30.
- 박혁진, 2018.10.22, 주간조선·입소스코리아 '한국인의 정치지형 10년 변화' 여론조사, 접속날짜: 2019.12.15,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29100001&ctcd=C01>.
- 서환주, 2019,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탐색: 조절 이론 및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현장성과 다양성 강화를 위한 논쟁과 소통의 장*, 한국사회경제학회 2019 가을학술대회 자료집.
- 우경봉·이근·나희승·조봉현·곽성일·최용훈, 2019, *동아시아와 통일한국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조지 레이코프, 2015.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유나영 옮김), 와이즈베리.
- 정동준·김선·김희정·나용우·문인철·송영훈·최규빈·임경훈·이정옥, 2019, *2018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채장수, 2003, 한국사회에서 좌파 개념의 설정, *한국정치학회보*, 37(2), pp. 219-238.

- 채장수, 2004, 한국 좌파집단의 인식과 지향, *한국정치학회보*, 38(3), pp. 93-112.
- Aidt, T.S., Castro, V., and Martins, R., 2018. Shades of red and blue: government ide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ublic Choice*, 175, pp. 303-323.
- Everett, J.A.C., 2013. The 12 Item Social and Economic Conservatism Scale (SECS). *PLoS ONE*, 8(12), e82131, pp. 1-11.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82131>>.
- Fosgaard, T.R., Hansen, G.L., and Wengström, E., 2019. Cooperation, framing,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58, pp. 416-427.
- Jarrodi, H., Byrne, J., and Bureau, S., 2019. A political ideology lens on social entrepreneurship motivation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31(7-8), pp. 583-604.
- Kroh, M., 2005. Surveying the Left-Right Dimension: The Choice of a Response Format.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Socio-Economic Panel Study Discussion Papers*, 491,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 Thomsson, M.K. and Vostroknutov, A., 2017. Small-world conservatives and rigid liberals: Attitudes towards sharing in self-proclaimed left and right.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35, pp. 181-192.
- William H.G., 2016. *NLOGIT VERSION6 Reference Guide*, Econometric Software, Inc.

부 록

1. 귀하는 스스로를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성향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진보적이다. ② 진보적이다. ③ 진보와 보수의 중간 정도다.
④ 보수적이다. ⑤ 매우 보수적이다.

2. 위 1번 질문(성향 판단)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2개 선택)

- ① (과거 포함) 지지하는 인물 또는 정당의 정치적 색채 관련
② 경제문제 관련(최저임금, 부동산 등 성장과 분배)
③ 통일 및 외교, 안보문제 관련
④ 교육문제 관련
⑤ 다문화 정책 관련(경제적 이민 수용 등)
⑥ 성소수자문제 관련
⑦ 출신지역, 가정 및 주위의 전반적인 분위기
⑧ 막연히(잘 모르겠다)
⑨ 기타

3. 귀하는 남북통일을 원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4. 최저임금 관련해 최근 사회적 논의가 뜨겁습니다. 내년(2020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설명>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며, 월급 기준 174만 5천 원입니다. 작년(2018년) 대비 10.9% 인상된 금액입니다(시급은 원 단위, 월급은 백 원 단위에서 반올림). 최근 한국 사회의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면 내년(2020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최저임금에 동의하십니까?

① 대폭 인상: 2020년은 추가 10% 인상하여 시급 9,190원, 월급 192만 원을 실시해야 한다.

② 소폭 인상: 2020년은 추가 5% 인상하여 시급 8,770원, 월급 183만 2천 원을 실시해야 한다.

③ 소폭 인하: 2020년은 5% 인하하여 시급 7,930원, 월급 165만 8천 원을 실시해야 한다.

④ 대폭 인하: 2020년은 10% 인하하여 시급 7,520원, 월급 157만 1천 원을 실시해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관심 없다).

5.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형태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①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는 정규직 증가 정책에 적극 찬성하며, 이를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② 정규직 증가 정책에 대체로 찬성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④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적극 반대하며, 고용유연화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할 문제다.

⑤ 잘 모르겠다(관심 없다).

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설명> 2018년 12월 13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해당 업종 진출 또는 확장이 5년 동안 금지됩니다. 법 위반이 발견되면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기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법처리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뒤따릅니다.

- ①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② 법 취지에 동의하지만 많은 업종이 지정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 ③ 법 취지에 동의하지 않으며, 5년 후에는 폐지되어야 한다.
- ④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라 적극 반대한다.
- ⑤ 잘 모르겠다(관심 없다).

7. 한국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고가의 주택, 토지를 보유하거나 다수의 주택, 넓은 토지를 보유할 경우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정보 또는 한국 주택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느낌을 바탕으로 정책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부동산 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 ②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며, 종합부동산세의 소폭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 ③ 부동산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의 소폭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 ④ 부동산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적극 반대하며,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관심 없다).

8. 한국의 고교 및 대학 교육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설명>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사교육(과외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입시제도의 다변화 및 대학교 평준화 등을 주장합니다. 경쟁교육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시험과 같은 경쟁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은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등 평등교육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시도별 교육감의 성향은 지역에 따라 다소 다릅니다.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평등교육에 찬성하는지 경쟁교육에 찬성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예) 서울 조희연교육감: 평등 지향, 경기 이재정교육감: 평등 지향, 대구 강은희교육감: 경쟁 지향

① 평등교육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대학 서열화, 고교 사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② 평등교육의 취지에 동의하며,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해야 한다.

③ 경쟁교육의 취지에 동의하며,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해야 한다.

④ 경쟁교육에 적극 동의하며, 고교 비평준화(지역 명문고 부활 등) 실시 등 경쟁을 통한 실력 배양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관심 없다).

9. 다문화정책과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설명> 한국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동남아시아 등 저임금국가 노동력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이주에 찬성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①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에 구애 받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다문화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②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방안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선별적 이주 등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③ 한국이 빠르게 다문화사회가 되는 것에 반대 입장이며 이민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④ 더 이상의 다문화사회 진행에 적극 반대하며, 출산장려 등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관심 없다).

10. 성소수자(LGBT: 여성 및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의 결혼 인정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설명> 성소수자는 영어 약자 LGBT로 자주 표기되며, 여성 및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LGBT에 무성애자, 제3의 성 등을 포함하여 성 정체성에 있어 사회적 소수자 전반을 나타냅니다.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등 성소수자의 제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동성결혼 인정 등) 경우 우리가 납부한 세금이 그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①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동성결혼 인정 등의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②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

③ 성소수자의 제도적 인정에 부정적이다.

④ 성소수자 관련 문화에 적극 반대하며 어떠한 제도적 인정도 거부한다.

⑤ 잘 모르겠다(관심 없다).

A Study on the Consistency of Policy Preference and Political Consciousness for Korean Citizen

Woo, Kyoungbong*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onsistency of relationship between the choice of policy preference and the political consciousness. For the choice of policy preference, the following eight major issues are covered as model variables Korea reunification, minimum wage, employment stability, types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of micro enterprises(생계형 적합업종),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종합부동산세), education culture, multi-cultural society, and sexual minority. A national survey response from 1250 individuals collected in January 2019 were used for the statistical model. The main results are indicated below.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sistency of relationship between the choice of policy preference and the political consciousness has been observed with the variables of the social issues of Korea reunification, minimum wage, education culture, and sexual minority. In particular, the variables of Korea reunification and sexual minority have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e in Korean citizens' conservative disposition. There is an increase of odds of Korea citizens being the moderate disposition if they make a progressive choice in the employment stability. The conservative choice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variable was high,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 odds of moderate disposition of Korean citizens.

Key word : policy preference, progressivism, conservatism

*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associate Professor, wkb@knou.ac.kr

